

##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혁과 회계투명성 역설\*

### Accounting System Reform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Paradox in Korea

최 종 서(Choi, Jong-Seo)\*\*

####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perceived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does not improve despite consistent reform efforts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o-called Korea discount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by transforming the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into one comparable with global standar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was established in 1997, as a professional private-sect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etting and revising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with a view to converging towar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2007,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oad map for full-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om 2011,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complete transition of Korean accounting system to global standard. Notwithstan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PwC, IMD, and WEF repeatedly placed Korea in the bottom tier of national transparency rankings, and recently Korea was ranked at the lowest position in IMD report, defying the expectations of Korean accounting commun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an inseparable element of social transparency, and is thereby not exclusively determined by accounting system reforms. Transparency is inextricably connected with the integrity and the soundness of society as a whole. The lack of accounting transparency or opaci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uni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revalence of corruptions, embedded in the politico-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ich persis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was led by major business conglomerates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which ironically resulted in the empowerment of business group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 elites create opportunities for illegal transactions, which serve as the root cause of Korean accounting opaci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Key words: accounting system reform, accounting transparency, corruption, business-government collusion, corporate governance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I. 문제의 제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회계 및 기업부문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어 온 화두는 아마도 투명성(transparency)이었을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 국가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정부로부터 민간 전문기구로 위양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회계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다가 2007년에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 취지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회계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있었으며 2011년 이후 상장기업에 대한 적용이 의무화됨으로써 한국의 회계는 바야흐로 IFRS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투명성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일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는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Price Waterhouse & Coopers (이하 PwC), IMD 및 WE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회계신인도의 국가순위는 오히려 더욱 하락하여 최근에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는 상황마저 초래되었다.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제도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현 상황은 역설적이기도 하며 정부와 유관기관에 깊은 고뇌를 안겨 주고 있다. 현저히 저평가된 투명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최근 관계기관들의 주도로 수행되었다.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등은 대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심층적 인식조사, 설문조사, 경성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 다각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곡된 PwC의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나 회계업계는 우리나라 회계 및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장지인 외, 2002, pp.22-23)

“IMD의 회계 및 감사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내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얻어진 것으로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회계 및 감사 실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송인만 외, 2007, p.5)

“우리나라의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IMD, WEF 등의 낮은 회계투명

성 순위에 대한 기사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내용이 부정적이다. 이는 회계전문가 집단 이외의 일반 경제 활동가들에게 마치 사실과 관계없이 회계부정이 만연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 (중략) ... 향후에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보도자료나 대응자료의 발표를 자제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재경 외, 2016, p.112)

상술한 진술들은 여러 국제기구의 조사결과는 왜곡된 것이며 신뢰하기 어려워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제도개혁의 결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회계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평가는 편의와 오류를 지닐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장기간에 걸쳐 제도개혁과 투명성의 부조화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회계투명성은 사회투명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청렴도, 바꾸어 말하면 부패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에 특정의 부패구조가 온존하는 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투명성의 개선은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회계투명성은 회계제도 개혁의 종속변수이기에 앞서 사회의 고착화된 부패구조와 구조적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50년대 초의 전쟁폐허로부터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규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6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정책과 이에 협력한 소수 기업집단의 공헌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엘리트 카르텔(elite cartel) 혹은 상호인질(mutual hostage) 관계로도 묘사되는 정경유착의 고착화가 수반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도 온존하고 있다.<sup>1)</sup> 시장경제의 영역을 벗어난 기업과 정치세력 간, 혹은 기업생태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거래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의 왜곡을 초래하며 이러한 왜곡이 존재하는 한 높은 수준의 사회투명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에 의해 보고되는 회계수치가 기업의 진실한 부의 크기를 반영하는 정도를 회계투명성이라 한다면 기업의 부 자체가 왜곡된 조건 하에서 투명한 회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관찰가능한 부의 크기를 회계수치에 반영하는 규칙이 보다 정교해지고 체계화되며 집행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관찰되는 부 자체가 진실한 부와 괴리되어 있다면 아무리 엄정한 규칙에 따라 산출된 회계수치라 할지라도 진실한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곤란하다.

1)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국가경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즉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관계를 Johnston(2005)은 “엘리트 카르텔형”, Kang(2002)은 “상호인질형”의 부패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논단 사태가 발단이 되면서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경유착 이슈가 매체의 전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은 정치인, 관료, 재벌이 뇌물과 특혜라는 호혜관계 속에서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2017년의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우리나라는 불신국가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정부, 기업, 미디어, NGO 등 4개 사회주체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38%에 그쳐 조사 대상 28개국 중 23위를 기록했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는 24%에 불과하여 최근 이슈화된 재벌횡포, 정경유착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회계와 기업부문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인도의 향상을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제도개혁 노력이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부패구조와 관련지어 설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의 기존 회계문헌에서 시도된 바가 없으며 제도회계 연구와 부패연구의 관점을 접목시킴으로써 전통적 회계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나온 회계제도 개혁의 현황을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회계투명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도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된 국내 연구진의 투명성 평가결과를 대비시켜 살펴본다. 나아가 인식 부조화의 원인으로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의 지속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경유착 부패구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부패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하여 논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 Ⅱ. 우리나라 회계제도개혁 과정의 개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발전과정은 크게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는 다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전의 시기와 도입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기간에 해당하는데 정부주도의 제도도입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른 제도의 확장과정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 시기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며 회계보고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수탁책임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회계부정과 부실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 시기의 제도개혁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와 국제적 회계신인도의 제고를 일관된 정책목표로 삼았다.<sup>2)</sup>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정치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던 기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이 채택되었고 경제개발의 선봉에 선 소수의 대기업들은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다. 재벌의 성립 배경에는 정부로부터의 특혜와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정경유착 구조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재벌기업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에 의존하여 단기간에 거대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태생적 약점을 안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력과의 유대를 통하여 이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진적 발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가능한 한 경영 상태를 은폐하여 정치적 로비활동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회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회계수치에 의한 성과보고는 전략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회계실무는 자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경영자의 경영권과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운영되어 나왔다. 이러한 회계 및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관치금융으로 대변되던 금융관행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외환위기를 촉발한 원인의 일단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경험하였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수익성을 무시한 규모 위주의 성장정책,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결여 및 경영 불투명성, 금융제도의 취약성 등이 지적되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자금을 지원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질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IMF는 아홉 차례의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통해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회계개혁을 요구하였고 세계은행도 경제재건차관과 구조조정차관의 지원협의를 통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요청하였다. 이 중 기업부문 개혁은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의 5대 원칙으로 요약된다(한국회계기준원, 2016).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가능한 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회계기준을 대폭 손질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더불어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1998년 12월 10일 제정하는 등 금융업회계준칙을 정비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도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회계제도 개선과 더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 본장의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2016)이 작성한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5년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분식회계를 억제하고자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3년 단위의 감사계약을 법제화하였으며 외부감사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해 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IMF 및 세계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1999년 6월 3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단체가 회원인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현, 한국회계기준원)이 출범하여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0년 3/4분기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통하여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회신을 수행해 회계기준 제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2001년 말부터 미국에서는 Enron과 WorldCom의 회계부정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미국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Sarbanes-Oxley법이라는 회계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독립적 회계감독기관인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설립, 피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금지, 5년 주기의 파트너 의무교체를 포함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사업보고서의 CEO/CFO 인증 및 분식 적발시 보너스 박탈 등의 기업의 책임성 강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의 회계개혁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SK Global 등의 대규모 회계분식 의혹으로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회계개혁법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회계개혁안을 2001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이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CEO·CFO인증,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 제한, 내부고발자보호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2003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은 계속된 제·개정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갔으며 2006년 말 기준으로 K-GAAP는 IFRS와 약 90%의 정합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한국회계기준원, 2016).

2000년대 들어와서 회계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와중에 2006년부터 IFRS의 전면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6년 2월 IFRS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다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15일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서 제시된 IFRS 전면도입의 필요성은 IFRS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한국의 대외신뢰도 저하 및 기업부담 완화, 회계정보의 공신력 제고 필요 등으로 나타났으며 IFRS 도입의 기대효과로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회계선진화를 위한 한국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부담 경감 등이 지목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전면 도입에 따르는 대내외 인지도의 획기적 개선과 국제적으로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기업들에 일괄 적용하는 Big Bang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장기업 및 주요 금융

업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되며 2009년부터 상장기업의 조기적용이 허용되었다.

일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FRS 도입은 여론과 무관하게 정부주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된 측면이 있다. 수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고 도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많은 국내 상장기업들과 회계실무가들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며 도입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도입과정에서는 회계시스템의 전환에 수반되는 고비용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IFRS가 전면 시행된 이후 학계에서는 경제적 영향과 회계정보의 질적 변화의 측면에서 많은 분석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인 결과는 혼합적이다.<sup>3)</sup>

### Ⅲ.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회계투명성 향상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의 회계기준원 설치, 회계기준의 대폭개정에 뒤이어 2011년 이후의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회계제도개혁은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의도한 것이다. 불투명한 회계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배경으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관행, 불투명한 기업회계, 기업의 충분하고 공정한 공시활동의 부족 등이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회계투명성은 사회투명성의 핵심적 요소이며 사회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회계투명성만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본 장에서는 투명성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결과에 대해 개관한다.

#### 3.1. 투명성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투명성은 정보의 기록과 공개 및 예측성과 관련하여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감추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때 유지된다. IMF(1998)는 기업투명성에 대하여 기존의 조건, 의사결정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적시성, 완전성, 계속성, 위험관리, 감사와 통제 과정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chulzinger(2001)에 의하

3) 한국회계기준원(2016)에서는 IFRS 도입 5년간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하에 IFRS 도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IFRS 도입의 경제적 영향, IFRS 도입이 외부감사와 회계감독제도에 미친 영향, IFRS 도입이 공공기관의 회계정보와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IFRS 도입절차 및 운영에 관한 평가 등의 연구과제가 포함되었다.

면 투명성이란 알고 싶어 하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균등하게 공유되며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합리적 규칙에 따라 행함을 의미한다. 또 Vishwanath and Kaufmann(2001)의 연구에서 투명성은 기업의 투자자, 채권자, 관련 공공서비스,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각종 기관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당면한 현상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제공될 때, 그리고 적시성을 잃은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도되어 전달될 때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PwC(2001)는 불투명성(opacity)을 기업, 재무 및 정부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하며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불투명성(accounting opacity)은 회계규칙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식적이고 널리 인정되는 실무가 결여된 상태로 정의하였다.<sup>4)</su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서는 기업이 완전공시를 통하여 정직하고, 효율적인 시장,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가능하고 종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업투명성이라고 하였다. Standard and Poor's(2002)에서는 투명성을 기업 경영상 및 재정상의 이행과 기업의 지배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hattacharya et al.(2003)은 회계불투명성을 기업의 보고이익이 진실한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하고<sup>5)</sup>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공격적 회계이익조정, 손실회피 성향 및 이익유연화 정도를 측정도구로 제시하였다. Bushman and Smith(2003)에 따르면 기업투명성이란 공개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투자안 분석, 지배구조, 기업가치와 위험에 관한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정보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한 Bushman et al.(2004)에서는 정보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기업투명성(corporate transparency)이라고 하고 이를 공개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투자기회, 지배구조, 기업가치와 위험에 관한 관련성 및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up>6)</sup>

4) PwC는 상술한 정의에 입각하여 불투명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진 35개국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각국 시장의 불투명성 정도를 지수화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항목은 부패(corruption),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legal protections for business),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 회계기준과 실무(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및 규제제도(regulatory regimes)의 다섯 가지 분야인데 각국의 총체적인 불투명지수는 각 분야의 불투명지수를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한 값으로 구하였다.

5) "the extent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reported earnings of firms fail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the true, but unobservable, economic earnings of firms"

6) "the availability of firm specific information to those outside publicly traded firms" 이들은 기업투명성을 기업의 보고측면(측정기준, 적시성, 감사의 질, 기업지배구조 공시), 사적 정보의 입수측면(재무분석가의 수, 내부거래자 활동 등), 정보의 전달 측면(매체의 보도)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요컨대 투명성이란 실제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왜곡되지 않으며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진실한 상태에 대해 정통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기업, 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회계에 국한하여 투명성을 정의한다면 회계수치가 기업의 진실한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회계수치가 경제적 실상을 수치로 측정하는 데는 제도적, 기술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환경을 둘러싼 총체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측정 가능한 대상을 규칙에 따라 충실히 회계수치로 표시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투명성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진실한 가치, 또는 부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회계수치가 이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회계투명성도 달성될 수 있으나 진실한 부가 은폐되거나 왜곡된 형태로만 관찰될 수 있다면 회계절차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정보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가치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투명성을 사회의 총체적 투명성으로부터 분리시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sup>7)</sup>

### 3.2. 국제기구에 의한 우리나라 회계투명도 평가

PwC(2001)의 국제 불투명성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학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국내 연구진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PwC는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35개국을 선발하여 불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소득 중상위국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되었다. 불투명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설문조사팀이 기업의 임원, 은행의 대출담당자, 애널리스트 및 각 대상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PwC 소속회계사를 대상으로 2000년 3분기와 4분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PwC는 특히 회계분야의 불투명성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의 적절성 여부,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회계기준의 준수정도,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를 감독 기관에 보고하는 빈도, 회계기준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대출위험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위험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회계기준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의 영업 및 투자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본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불투명 회계처리 사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조사대상국 35개국 중 최하위인 2.1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회계제도가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산국가나 최근

7) 불투명성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화, 자본시장 기능의 약화,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의 증가와 시장실패, 부패의 유발, 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의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반면, 투명성 증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익으로는 부패 및 비리의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자와 시장의 활성화, 거래비용의 감소 및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강동관 외, 2007).

에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국가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이었다.<sup>8)</sup>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세계경쟁력센터(World Competitive Center)는 해마다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행하여 60여 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자료나 경성자료에 대한 평가와 설문조사가 병행되는데 설문조사는 경영 실무, 노사관계, 부패, 환경문제 또는 삶의 질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다. 설문은 조사대상국의 경험이 많은 고위 경영자들에게 보내지며,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에 따라 표본이 선정된다. 설문대상기업은 국제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고 조사 대상 경영자는 기업 내에서 국제적 경험을 갖고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는 매년 1~4월 기간 중 시행되며 응답자가 설문지를 직접 IMD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는 2005~2016년 기간 중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최상 22위, 최하 38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25위를 전후해서 연도별 순위가 변동하고 있다. 회계투명성 순위는 최상 37위, 최하 61위를 기록하였는데 대체로 50위권 이하에서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 동안의 평가는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61위를 기록하여 국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서 1971년에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평가·발표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거시경제, 공공제도 및 기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로 구성된다. 동 지수는 3대 분야, 12개 부문, 총 112개 지표로 구성되며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표가 산출된다. 112개 지표 중 80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설문지표이고 나머지 32개는 정량지표이다. 설문조사는 1~7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전 세계 협력기관을 통해 해당국의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WEF의 파트너기관이고 2015년의 경우 세계 총 13,213개의 응답 중 우리나라로부터 100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sup>10)</sup>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5~2016년 기간 중 최상 11위, 최하 26위

8) 한국과 유사한 점수를 받은 국가들로는 중국(2.28), 러시아(2.37), 일본(2.37), 남아공(2.37)이 있다.

9) 평가는 경제운용 성과, 행정부의 효율성, 기업경영 효율성, 발전 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은 다시 5개의 하위 부문으로 나누어져 총 20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종합평가결과인 국가경쟁력은 이들 20개 하위부문이 각각 5%의 가중치로 합산된 점수인데 하위부문마다 다시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뉘어 따라 전체적으로는 300여개의 항목별 점수가 취합되어 국가경쟁력이 최종 평가된다. 설문조사는 1~6점 척도로 측정되며 이를 다시 0~10점 척도로 환산하여 이용한다. 전체 평가 중 경성자료에 의한 평가가 3분의 2,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10) 3대 분야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이다. 기본요인 분야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등 4개 부분으로 나뉘고, 효율성 증진 분야는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성, 시장규모 등 6개 부분으로 나뉜다. 혁신 및 성숙도 분야는 기업 성숙도와 혁신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는 기본 요인 분야중 제도부분에 속하는 지표이다.

로 기록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기존 순위 대비 최하위권인 25~26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은 최상 35위, 최하 96위이며, 2009년 이전에는 50위권 정도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70~90위권에서 머물고 있다. IFRS를 도입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회계투명성 순위가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관계기관들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WEF 세계경쟁력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 이하 기술, 교육 등과 관련된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들에서 해당 영역의 순위를 조사하고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 3.3. 국내연구진에 의한 회계투명성 평가

장지인 외(2002)는 PwC(2001)의 경제불투명성 지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PwC의 설문을 이용하되 애널리스트, 은행실무가, 회계사 및 CFO 그룹별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PwC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극히 적다는 점과 설문내용 중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조사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의 대표성 결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나친 지적에 따른 부정적 선입견의 가능성 등이다. 서면으로 전달되고 작성되는 과정을 거쳐 2002년 1분기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PwC의 가중평균치 2.12에 비해 더 높은 2.69의 가중평균치가 구해졌고 이는 PwC의 조사대상 35개국 중 2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유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정보 이용자 집단과 공인회계사 집단은 CFO 그룹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이익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인회계사 그룹이 CFO 그룹에 비해 현행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정보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2007년에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계와 감독기관 및 실무가들과의 연구조사와 토론을 통해 회계신인도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는 2007년에 “국제적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다시 2010년에 “제2차 국제적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을 출간하였다. 송인만 외(2007)는 1차보고서에서 IMD의 2006년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한 사실을 국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한국의 회계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회계투명성 평가항목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회계투명성을 국가 회계투명성과 기업 회계투명성으로 나누고 이 둘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고, 장지인 외(2002)에서 사용된 설문을 이용하여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23명의 파트너급 이상의 회계사를

11) 교육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개발원, 한국전력공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들이 WEF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계투명성 순위가 상승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12)</sup> 또한 송인만 외(2010)는 2차보고서에서 2009년 기업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회계감독자, 회계학교수, 재무분석가, 대출심사자 등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PwC(2001), 장지인 외(2002)의 설문조사, 송인만 외(2007)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회계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비교를 위해 과거 설문과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결과에 의하면 회계투명성, 회계기준의 준수정도, 재무정보의 접근용이성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sup>13)</sup>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년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일련의 회계감독제도 개선 방안,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방안,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창우 외(2011)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회계감독제도 개선,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회계감독제도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있는 품질관리 유인이 부족한 점, 기업 내부감시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부재한 점, 회계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낮은 점, 상법 규정과 회계감독기능이 분산되어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회계법인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회계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는 완전경쟁에 따른 저가출혈 경쟁, 소규모 자본에 의한 회계법인 설립 가능, 단기이익 집중에 따른 장기발전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대다수 기업이 낮은 감사품질을 선호함에 따라 회계서비스의 품질이 낮으며 규제측면에서는 정부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회계제도 및 관행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부적인 질문들을 통하여 IMD나 WEF가 갖고 있

12) 이들은 회계투명성 평가를 국가회계투명성과 기업회계투명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국가회계투명성은 제도, 법, 경제적 측면의 투명성으로 측정되며, 경성자료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업회계투명성은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는데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더라도 제도의 이행여부는 기업문화와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계투명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이들은 회계투명성 제고의 가속화를 위한 제안사항으로 회계제도 도입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계자료의 영문공시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것,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간사계약의 주체를 중립적 입장의 감사위원회로 전환할 것, 재무제표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 회계감독기관의 공시감독을 강화할 것, 정보이용자로서의 회계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해외 기관에 의한 평가 향상을 위해 국내 회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해외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회계투명성연구에 대한 영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외국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는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학계와 공인회계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설문결과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IMD의 설문결과는 악화되고 있어 상반되는 추세를 보인다.<sup>14)</sup>

한정화 외(2012)는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투명성 평가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과 관련하여 투명성 수준에 대한 판단은 외적 제도구축과 시행정도 뿐만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투명성은 사회투명성과 기업투명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노력이 국가경쟁력의 개선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해하는 사회, 제도상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감사인 선정방식의 개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책임강화, 부정에 대한 처벌강화, 민간기구 주도의 제도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사회투명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는데 보도의 내용을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자의 인식과 연계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보도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부정적 보도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그 횟수 또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고 국가경쟁력내지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과도한 언론보도가 회계투명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은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및 언론분석에 기초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감사시장의 과당경쟁 방지, 기업 공시제도의 개선, 공시정보 생성 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정부나 비영리기관 등 전반적인 사회투명성의 개선,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강화,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이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억제하고 특히 언론보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작성을 최소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재경 외(2016)는 국제기구에 의한 저조한 회계투명성 조사결과가 실제로 회계투명성이 낮아서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설문응답자의 인식상의 편의(bias in perception)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에 두고 경성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IMD/WEF의 설문문항을 동일한 설문대상 집단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있어서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회계투명성 점수를 모르는 상태와 알고 난 후의

14) 이 밖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회계학회 등 회계투명성과 관련이 있는 기구들이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국경영학회도 2012년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방안연구’의 일환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평가 및 자기회사의 회계투명성을 평가한 후의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비교대상국 대비 중위권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각적인 형식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집단은 우리나라가 중위권 이상이 되는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에서 회계투명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경영자의 인식과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회계업무 역량, 회계기준의 문제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회계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IMD/WEF의 발표에 대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나친 관심과 그에 따른 언론보도를 자제할 것, 경영진의 공지를 높이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교육을 확대할 것, 회계정보 생산주체인 경영자와 감독기관의 소통을 확대할 것, 회계투명성이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금융체제로 전환할 것, 회계제도 감독기관의 자세를 감독과 규제에서 봉사자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 3.4. 회계제도 개혁과 회계투명성평가 부조화의 원인분석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부단한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왔으나 정책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국제기구에 의한 국가 회계투명성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와 회계담당자, 회계사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 역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다는데 대해 그다지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1997년의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IMF와 세계은행과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계제도 개혁을 타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07년의 IFRS 도입도 민간부문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실질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변화과정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도진·백원선(2016)의 설문조사에서 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애초에 시장참여자들은 투명성의 개선효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직 규제당국과 기준 제정기구만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FRS의 도입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회계제도 개혁은 회계정보의 작성자와 이용자가 새로운 회계제도와 관련한 경제적 유인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공공재 형태로 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sup>15)</sup>

회계투명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회계투명성은 회계기준, 회

15) 이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작성자는 경제적 효익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의 증대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계감사, 감독 등의 집행강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등 제반요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Brown et al.(201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법 집행 강도(legal enforcement)와 감사권한(audit power)에 있어서 비교대상 51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법집행 강도는 재무제표의 감시규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권한, 규제당국의 담당자 수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감사권력은 감사비용, 감사인 교체, 감사인의 소송위험 등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다. 또 심호식 외(2016)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회계 품질이 높아지는 경우 자본비용이 현격하게 낮아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이 스스로 회계정보의 질을 높일 유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평가는 감사와 감독 및 기업의 지배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보의 공시를 꺼리는 비밀주의 경향, 보수주의의 강조, 통일성을 강조하는 표시의 획일화 경향으로 대변되는 회계문화를 지니고 있어 원칙중심의 회계제도와 양립되기가 쉽지 않다. 원칙중심의 IFRS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먼저 규칙중심의 사고의 틀과 문화를 원칙중심의 사고의 틀과 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이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최종서(2004)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이 내포하는 가치체계가 기존의 문화와 일치 혹은 상치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무의 변화가 촉진 혹은 억제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원칙중심의 회계제도가 일관되게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독제도가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기구의 법적 집행 강제력은 충분히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최종 집행력은 사법기관에 있고 따라서 사법기관의 법 집행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상술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계불투명성은 부패(corruption)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의 결여는 본질적으로 부패의 한 단면이다. 회계 불투명성은 기업이 경제적 실상을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은폐하려는 동기와 기회로부터 연유하는데 이는 기업부패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회계수치의 왜곡가능성에 제약을 부과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동기와 기회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투명성의 문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투명성이 향상되지 못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구조와 연관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회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동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으로부터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다각적인 회계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식의 오류라기 보다는 불투명한 사회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부패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회계투명성 수준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정치·경제 및 기업생태계에 내재한 부패구조의 개선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패현상을 논의한 문헌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직관을 얻고자 한다.

#### Ⅳ. 우리나라 회계불투명성의 지속성과 부패구조의 연관성

본 장에서는 어째서 지난 20여 년간 회계제도개혁이 부단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및 회계신인도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저조한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부패구조 고착화로부터 해답의 일단을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회계학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구조로부터 회계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이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다. 부패문헌에는 정치권력과 기업의 유착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회계불투명성의 지속현상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한다.

##### 4.1. 부패와 불투명성의 관계

회계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기업이 자본시장, 제품시장, 노동시장, 경영권시장 등 제반시장 기제를 통하여 사업자금과 인적 자원, 무형의 영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희소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이득이 될 수 있다. 투명성은 시장의 역 선택(adverse selection)을 해소하고 체제 속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제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을 통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정치권력과의 음성적 거래를 통하여 지대를 획득하고 담합이나 내부거래를 통하여 비정상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투명성은 거래 참여자들이 기회주의적인 이득을 창출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대추구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실패 및 암묵적인 거래의 여지, 다시 말해 부패구조가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시장이 불완전하고 기회주의적인 지대획득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는 거래참여자들이 불투명성을 오히려 선호하게 된다.

부패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20여 년간 권력형 비리, 뇌물수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로부터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간영역으로 부패의 발생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패 자체가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 깊이 몰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박준식·유석춘, 1998). 이에 의하면



부패는 일상화된 삶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이를 강하게 구조화시키는 사회적 관행들과도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발전국가모델에 따라 국가주도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추진되었는데 주요 특징으로는 중상주의 정책, 소수독점자본의 폐쇄적 경영체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지대 추구적 경영관행, 자발성·참여·신뢰축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미발달로 인하여 시민적 자발성보다는 혈연·지연·학연 등 전통적 가족·우정 거래모형의 지배적 영향력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제 식민통치, 3년간의 한국전쟁은 사회적 자본의 체계적, 전면적 파괴과정이었다. 국가중심 발전논리가 지배하던 1960~1970년대의 기간에도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는 통로는 열리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자본은 혈연·지연과 같은 전통적 연고와 이기적이고 협소한 가족주의가 보편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대신하였다(박준식·유석춘, 1998). 그 과정에서 전문 관료제는 정경유착의 고리와 연결되었고 발전을 주도해 온 세력들 자체도 거대한 이익추구 집단으로 변화했다.

개방된 시장경제 사회와 폐쇄적인 집단중심 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공개주의 대 비밀주의라 할 수 있다. 시장중심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 공정성, 공개지향성이며 모든 개인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가치가 되는데 반해 연고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한 집단이익의 추구, 비밀주의를 통한 집단이익의 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수립하였으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아직 성숙한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가치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체제 속에는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상존해 있고 미성숙한 법제도와 집행력의 부족으로 이를 위한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사회 및 기업의 불투명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제공한다.

#### 4.2.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

부패란 “사익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를 위배하며,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라고 정의된다(김은경 외, 201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제적·국가적 부패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부패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개별국가의 경제성장 및 부패예방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정책은 주요 부패측정 및 평가도구로 요약되는데 대표적인 부패측정 지표는 국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이다.<sup>16)</sup> 이 중 CPI는 기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외국기업인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는 지수인데 높은 수준의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CPI가 70점대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TI는 1994년 측정한 CPI의 결과를 1995년에 발표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까지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2016년 기간 중 100점 만점에 최고 56점, 최저 53점대를 기록해 왔으며 측정대상 176개국 중 50위권을 유지해 왔다. 2016년에는 53점을 획득하여 5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5년의 55점, 국가순위 43위에 비해 점수는 향상되었으나 순위는 크게 하락한 결과이다. OECD 소속국가 34개국 중에서는 2016년 현재 30위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절대부패로부터는 벗어났으나 청렴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서구 선진국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은경 외, 2015: 296-297).<sup>17)</sup>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황지태 외(2015)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가 실업문제나 다른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본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위아래를 막론하고 부패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82.9%를 차지하여 국민 대다수가 우리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4%였으며 부정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견해에는 94.5%가 동의하여 국민의 절대다수는 부패문제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열 진입에의 장애요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황지태·김정찬(2016)은 “왜 한국사회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 혹은 “왜 한국사회는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

16) GCB는 CPI가 외국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지표이다. 정치, 기업, 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여러 주요구성부문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도를 측정하는 모델이다. BPI는 기업인의 뇌물공여 정도를 측정하여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대상국가인 고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지표를 의미한다. BPI는 2000년부터 측정하여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 조사대상국 28개국 3000명 조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 측정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7.9점으로 29개국 중 13번째로 측정되었다.

17)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의 일본과 대만은 7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로서 90점대를 상회하는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기 위하여 Devin(2012)의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adversarial democracy)의 구별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사례로 분류한 나라들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이며 의회 내 유효 정당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반면에 승자독식형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사례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로 소선거구제(single member district election system)를 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며 원내에 진출한 유효정당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갖는다. Devin(2012)에 의하면 북유럽식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취약계층이나 소수세력 등이 원내에 쉽게 진출하여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화된 방법으로 줄이고 소수자의 문제 역시 제도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영미식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소수세력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아져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하층계급의 불만을 제도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그 결과 범죄를 통해 소수세력이나 취약계층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황지태·김정찬(2016)은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북유럽식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 사회가 최근 10여 년간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가 정체되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단서의 일단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의석비율과 정당득표율이 유사하여 선거에서 실제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 낮아지는데 Lijphart(2012)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민주국가들의 불비례성을 계산한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1.08, 덴마크는 1.60, 스웨덴 1.95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승자독식형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13.35, 프랑스는 19.56, 우리나라의 경우 21.97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 나라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패개념 속에 권력의 오남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권력통제 방식이 부패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주의시스템이 한 나라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하며 민주주의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극단에 가까운 승자독식형의 대통령중심제 및 입법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패의 지속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부패현상 가운데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투명성 결여를 가장 실질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이다. 승자독식형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속에서 대통령과 행정 권력에 집중되

어 있는 통치권과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제도로 말미암아 잠재적 정치자금의 후원자인 기업과 정치세력간의 접근이 촉진된다. 기업은 유력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권력을 독점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사업상의 특혜를 누림으로써 비정상적 성장과 초과지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업부패의 원인과 관련하여 제도의 불투명성, 조직문화와 윤리, 관행, 자본주의 체제, 재벌체제, 경제체제 등이 주로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결합하여 부패를 증폭시키거나 부패를 체제 부패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체제의 취약성이 조직 내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에 종속되고 사회체제와 조직의 부패 취약성이 개인의 윤리의식을 희석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부패행위가 사회 여러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김은경 외(2015)에서도 부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사회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조직과 개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전반적 제도가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4.3. 우리나라의 부패구조와 정경유착의 특징

한국사회의 부패를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는 정경유착이며 기업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근원적으로 정경유착과 여기에서 파생된 기업의 폐쇄적 지배구조로부터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특성은 대통령과 행정 권력에 통치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정치부패는 행정부패와 기업부패의 배후로 연루되며 행정부패의 근원적 조건이 되는 경향이 높다(양동훈, 2001, p.130). 대형 기업스캔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부패, 측근부패, 입법로비 청탁과 관련된다. 여기서 정치부패란 정치 지도자가 권력이나 부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국제투명성기구, 2004). 조현연(2011)은 우리나라 권력형 정치부패의 특징을 정경유착의 먹이사슬구조,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일과성 구호로서의 초기 사정개혁과 부패관행의 사회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의 남발을 들고 있다. 특히 매 정권마다 사정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친 결과 특권층에 의한 정치부패의 만연과 부패관행의 사회화, 대중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친인척 비리의 요인을 제왕적 대통령구조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권력의 3대 축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1,500개, 간접적으로 2만 여개의 자리 임명권을 가지며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된 제왕적 대통령 구조로 인해 권력형 비리와 청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후원자의 역할인 기업인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정치적 후원구조의 문제도 권력형 정치부패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황지태·김경찬(2016)에 의하면 정치부문과 기업부문 사이에 뇌물과 특혜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발생하는 부패구조는 부정선거유형, 정치자금유형, 권력남용유형, 정책왜곡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정선거 유형의 부패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집권을 하고자 하는 권력욕, 목표지상주의가 동기로 작용하며 그 근저에는 승자독식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다수결주의에 근거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권력지향성을 강하게 추동한다(강준만, 2013).

둘째, 정치자금 유형의 부패는 권력을 통한 정치자금 취득의 기회가 높은 한국의 정치현실의 반영이기도 한데 김영래(2002)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15배, 일본의 5배 이상의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시는 물론 평시에도 거대한 중앙당 조직을 비롯하여 지구당 운영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고비용 정치구조로 인한 막대한 정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치부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sup>18)</sup>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기업에 직접 강압적으로 작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혜-뇌물 공식에 따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재벌경제의 양적팽창이 가능해졌고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도 막대할 수 있었다. 문민정부의 도래와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정치자금에 대한 정권의 강압적 성격은 줄어들고 기업과의 관계는 점차 거래형으로 변화되어 갔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관치금융과 특혜를 통하여 급성장한 재벌과 기업은 정권의 변화와 달리 성장을 지속하였고 기업은 공개적으로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기에 이르며 강압적 정치자금 조성은 어려워졌다(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0). 정치권력이 직간접으로 민간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권력집중도가 높은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권력남용 유형의 부패는 역사적 전환에 따라 변화가 수반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권력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와 함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남용이 이에 편승하는 편이었으나 민주화 이후부터 점차 대통령 본인의 권력남용보다 친인척의 남용으로 비중이 옮겨간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법, 제도, 검찰과 경찰 및 정보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한계가 없을 정도로 권력이 발휘되었으나 민주화 이후부터는 권력남용의 크기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민주적 제도의 틀 속에서 권력남용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친인척과 측근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력남용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친인척 비리로 그친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친인척을 둘러싸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인물이 꾸준히 있어왔고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인척과 주변인이 정치를 불미스럽게 하는 일이 관례처럼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는 권력주변부에서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그 방식은 다양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을 공유하려는 행위는 개인의 비리차원을 넘어 국정을

18) 또한 정치자금법 등 현행 법제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정치자금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제기되는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웃도는 선거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김영래, 2015; 성중탁, 2015).

농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비선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비선정치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국가 관료시스템에 사적 통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최장집(2010)은 비선정치와 관련하여 인사에서 지역집중성과 배타성을 야기하고 폐쇄적 정책결정으로 국가기능에 부작용을 미치는 사적 권력은 특혜 연줄망의 정점이 되어 부패의 원천이자 온상으로 기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정책왜곡 유형의 정치부패는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책을 왜곡하는 범주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에 대한 정책로비와 입법로비, 그밖에 국정감사의 증인 빼주기를 위한 로비 등 청탁과 로비가 주로 포함된다. 정책왜곡의 주요 수단인 불법적 로비와 청탁은 로비의혹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 정치에서 로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로비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정보투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비활동이 대부분 은폐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적 로비와 청탁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거의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므로 많은 입법로비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2004)에서는 정치부패는 반드시 금품수수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권력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래 혹은 청탁에 대한 특혜의 형태를 띠며 정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사익에 의한 정책왜곡을 수반하는 로비는 법적 테두리를 막론하고 부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합법적 기부나 후원도 정책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정책왜곡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19)20)</sup>

부패발생 동기의 사회적 차원은 권력지향성과 승자독식주의, 목표지상주의, 경제제일주의이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상명하복의 전근대의식과 군사문화, 패거리문화, 정실주의, 연고주의, 관료문화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라는 한국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가 승자독식주의와 강한 권력지향성을 부추긴다. 또한 전근대적 문화가 잔존하는 정치, 공식사회의 관료화문제, 연줄에 의해 공무가 좌우되는 연고

19) 세계경제포럼(WEF)이 2003년 102개 국가의 7,741명의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합법적인 후원금이 정책에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20)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로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상적 관리이며 이에 의하면 주요 기업은 정치권의 지도급 인사에게 정기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상적 관리를 통해 연줄을 만든다. 그리고 입법로비나 청탁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진다. 입법로비를 위해서 기업은 상임위원회별로 학맥과 인맥을 동원한 인사가 이루어지며 최근 들어 입법로비의 창구는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로펌을 통한 대리관리 방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로비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맥과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은 입법컨설팅 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검찰출신,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위직 출신을 가동하여 대처하며 최근에는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 출신까지 로펌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의와 정실주의의 뿌리가 깊은 것도 원인이다. 반면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제약요인은 미약한 수준이다.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시민의식의 성숙수준, 투명성수준, 법치수준은 부패통제 요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갖추어졌고 정치관련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도 발달하였으나 이러한 제약요소는 아직 부패동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관료-기업(재벌)이 결합된 권력엘리트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세력관계가 변화해 왔는데 보수기반의 사회구조가 한국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차이에 따라 관료와 기업 권력의 협조수준은 달라진다. 또한 승자독식주의에 따른 극심한 경쟁은 한국 정치 내부에 갈등구조를 심화시켜 극심한 경쟁을 낳았고 이로 인해 집권비용은 높아지며 정치부패를 가속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Johnston(2005)은 한국사회의 부패유형을 엘리트카르텔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그에 의하면 기업은 정치 엘리트에 대해 거대규모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친기업 정책을 산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선진국의 시장형 부패로 보이는 일면이 있으나 한국의 금권정치는 더 단순하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엘리트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강력한 것으로 본다. 즉 한국의 부패구조는 한국 정치의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엘리트 네트워크가 가진 권력의 존속을 위한 금권정치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정 정책결정의 대가로 부패가 거래되는 경향보다는 집권엘리트 네트워크의 공동이익을 위한 부패가 우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패구조를 엘리트 카르텔 형으로 보는 이유는 공동이익을 위한 정치-관료-기업 네트워크의 강한 결속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업의 주도적인 뇌물제공이 증가하며 경쟁적이고 고비용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정치의 낮은 예측가능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체계적 수준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서 엘리트 카르텔 부패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는 정치권에서 군부세력을 몰아냈으나 부패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는 기업가의 힘을 키워주었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주도적인 뇌물 제공이 증가하며 한국의 엘리트카르텔은 2000년대에 와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는다고 분석한다.<sup>21)</sup>

Kang(2002)은 정경유착 부패를 국가권력의 강약과 기업경제력의 집중도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국가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경우를 상호인질형(mutual hostage), 국가권력이 약한 반면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경우를 지대추구형(rent seeking), 국가권력이 강하면서 경제력이 다수의 기업에 분

21) Johnston(2005)은 부패국가의 유형을 시장로비형(Influence Markets), 엘리트 카르텔형(Elite Cartel), 족벌형(Oligarchs and Clans), 독재형(Official Moguls)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엘리트 카르텔형은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엘리트가 그들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중진국형 부패 유형 국가로 분류한다.

산된 경우를 약탈국가형(predatory state), 국가권력이 미약하고 경제력 또한 분산된 경우를 자유방임형(laissez-faire)으로 지칭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상호인질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정치권력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반면 소수의 재벌은 다각화된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국가경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개된다. 거대화된 재벌기업은 정치자금과 음성적인 뇌물을 제공하여 정치권력을 포획하고자 하며 정치세력은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재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Kang(2002)은 양자의 관계가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처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세력과 재벌기업의 유착관계가 고착화되어 해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패와 불투명성이 일상화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4. 정경유착과 회계불투명성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년간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제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왔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더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유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자본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회계투명성이 이러한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됨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재무적 건전성과 미래전망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들이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또한 조달된 투자자금이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보고가 이루어질 때 성과에 대한 보상과 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자본시장의 잠재적 및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어 투자자와 기업,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특히 IMD, WEF와 같은 국제기구의 투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했다. 이는 그간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해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 개선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벌기업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과 정경유착 사례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후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경유착 관계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sup>22)</sup> 과거 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기간 중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은 정치권력과의 유대를 통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획득이 경시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였다.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단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진적이고 건실한 기업발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가능한 한 경영 상태를 은폐하여 정치적 로비활동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회계수치에 의한 성과보고는 전략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정경유착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재벌기업은 소유경영자 지배구조의 가족기업으로서 기업의 운명이 최대주주인 소유경영자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능력과 일신상의 처지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지녀왔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급성장을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고속성장기의 정책금융지원을 통한 규모 확장이었다. 경제성장기에 정부는 금융과 조세를 통하여 기업을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관치금융의 조절과 과세당국을 통한 세제혜택 및 세무사찰에 의존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당근과 채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경제성장기에 자금의 투자수익률은 자본비용을 상회하였으므로 기업은 가능한 한 많은 외부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재벌기업은 급속히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단기간의 양적 팽창의 결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낮은 지분율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와 같은 편법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상호보증, 계열회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의 파행적 관행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재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재벌집단에 속한 기업들과 이들과 다각적인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형성하는 생태계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벌기업은 폐쇄적 지배구조 속에서 소유경영권의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잡음을 야기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는 상생관계라기보다는 불공정한 주종관계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경유착 구조도 변화를 겪어왔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폐쇄적 지배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재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환경은 여전히 본질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회계투명성이 한국적 상황에서 가치를

22) 한국의 정경유착 발전단계는 원시기(이승만, 장면정권), 정착기(박정희 정권), 공고화·구조화기(전두환 정권), 일반화기(노태우 정권), 파국기(김영삼 정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도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은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금 제공형식의 본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인정받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경유착 구조의 해소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채 정부주도의 회계제도 개혁만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가 될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회계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신인도 개선이 정책당국, 학계 및 실무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선진국에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금융위기 직후의 회계기준 제·개정 권한의 민간기관 위양과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 그리고 2011년 이후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체감 회계투명성도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적 차원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체감투명성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저조한 회계 신인도가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의 일단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관점을 회계와 기업부문 밖으로 확장함으로써 회계불투명성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우리사회의 부패구조에 주목하였다.

회계투명성은 좁게는 기업투명성, 넓게는 사회투명성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회계제도와 실무가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하여 기업투명성이나 사회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사회투명성이나 기업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완전한 의미의 회계투명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회계는 기업의 경제실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로 담아내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한 회계수치가 규칙에 맞게 작성된다고 하여 진정한 경제실상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경제실상이 배후의 더 큰 사회구조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왜곡의 원천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경제실상을 반영하는 회계보고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칙을 국제적 정범에 맞게 체계화하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을지언정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실상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회계제도의 선진화가 회계투명성을 동반하지 못하는 것은 양질의 측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측정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는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부문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하나는 소수의 재벌그룹이 국가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해 나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재벌그룹은 지배구조

의 태생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정치부문과 일정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정치부문과 기업부문 사이의 유착관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정치엘리트의 지배적 권력단계에서 정치엘리트와 기업엘리트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로 진화해 나왔다. 승자독식형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전통적으로 정권창출과 정당제의 유지에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를 답습해 왔다. 초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소수의 기업가들이 정치세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뇌물-특혜의 공식에 따른 정경유착의 구조를 정착시켰다. 선택된 소수의 재벌기업은 짧은 기간에 특정 사업의 독점, 정책금융의 지원, 조세감면 등의 특혜에 힘입어 자기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룰 수 있었고 정치권은 이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취약한 정치기반을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전통적으로 정치세력과의 유대관계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특혜에 힘입어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배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재벌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소유권의 승계나 선단식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정치세력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특징 지워지는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는 재벌기업의 투명한 경영 및 회계보고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정치세력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공식적인 접대비, 기부금 명목의 준조세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든 기업의 회계보고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존·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권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있는 한 자본시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부차적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원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기간에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었고 이는 정치권의 영향력과 담보능력에 좌우되는 사안이며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감사시장 또한 자유수입제도 하에서 저가수입경쟁이 만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제약을 받아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경유착구조가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정치, 경제관계로 치환되고 주요기업의 폐쇄적 지배구조가 개방적, 합리적 구조로 개선되지 않는 한 회계제도의 개선으로 국제적 회계신인도의 급격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과 국가적 회계신인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관행과 의식의 개선이 동반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는 단기적인 제도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경제 구조와 기업문화를 투명성에 바탕을 둔 선진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장기적 정책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2013) 증오 상업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역(2000),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영래(2002),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125-142.
- 김은경, 신동준, 이경주, 이선중 (2015),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식, 유석춘(1998),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기제와 유형에 대한 고찰: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발전 연구, 제4권: 59-88.
- 성중탁(2015),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19(4): 209-238.
- 송인만, 이창우, 이갑재(2007),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1-113.
- 송인만, 이갑재, 정도진, 남혜정(2010). 제2차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1-125.
- 심호식, 이우중, 이재경, 한승엽 (2016), 회계투명성의 국가 간 비교 및 자본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8(2): 41-79.
- 양동훈(2001), 민주화과정에서 정치부패의 문제: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21세기 정치학회 11(2): 129-144.
- 이재경, 이우중, 심호식, 한승엽 (2016), (2016). 회계신인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심층적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보고서: 1-139.
- 이창우, 정도진, 전규안, 김이배, 이재은, 이명곤(2011),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보고서: 1-283.
- 장지인, 배길수, 전영순(2002).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1-36
- 정도진, 백원선(2016), IFRS 도입의 경제적 영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2016년 10월)
- 조현연(2011), 한국의 권력형 정치부패: 특성과 해법 탐색, 동북아연구 제16집: 29-57.
- 최종서(2004),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한 한국과 일본의 회계제도개혁의 성과에 대한 비교연구,”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73-111.
- 최장집(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한국회계기준원(2016), 한국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간의 경험과 교훈
- 한국회계학회(2016).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 한정화, 전성빈, 홍길표, 김문현, 윤태범, 황호찬 (201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경영학회 연구보고서: 1-129.
- 황지태, 김경찬 (2016),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김유근, 박준희(2015),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hattacharya, U., H. Daouk, and M. Welker(2003). “The World Price of Earnings Opacity”, The

- Accounting Review 78(3): 641-678.
- Brown, P., J. Preiato, and A. Tarca (2014), Measuring Country Differences in Enforcement of Accounting Standards: An Audit and Enforcement Prox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41(1/2): 1-52.
- Bushman, R., and A. J. Smith (2003). "Transparency,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Policy Review* 9(1): 65-87.
- Bushman, R. M., J. D. Piotroski, and A. J. Smith (2004). "What Determines Corporate Transparen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2 No. 2: pp. 207-252.
- Devin, K. J. (2012), "Social and Adversarial Varieties of Democracy: Which One Produces Fewer Criminals?" *Development and Society*, 41: 229-252.
- Johnston, M. (2005), "Syndrome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g, D. (2002). *Crony Capitalism: Corruption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Yale University.
- Price Waterhouse & Coopers (2001) *The Opacity Index, A Project of the PriceWaterhouseCoopers Endowment for the Study of Tnaspacency and Sustainability*.
- Schulzinger, R. D. (2001). Transparency, Secrecy, and Citizenship. *Diplomatic History*. 25(2): 165-178.
- Standard & Poor's (2002), *Transparency and Disclosure Study*.
- Vishwanath, T., and D. Kaufmann (2001). *Toward Transparency: New Approaches and Their Application to Financial Market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투고일자 : 2017. 08. 17  
수정일자 : 2017. 09. 27  
게재일자 : 2017. 09. 30

<국문초록>

## 회계제도개혁과 회계투명성

최 중 서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회계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회계신인도는 여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IMD 등 국제기구에 의한 회계투명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최하위권으로 강등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착수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회계투명성 개선 및 회계신인도의 향상은 우리나라 회계분야에 있어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창설,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등은 그동안의 국가적 회계제도개혁 노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은 보다 확장된 사회적 투명성의 구성요소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청렴도, 혹은 부패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분야에 온존하고 있는 정경유착 부패구조가 개선되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투명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회계제도개혁, 회계투명성, 부패구조, 정경유착, 기업지배구조